

중소상인의 생존권, 노동자의 건강권,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의실

주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기본소득당 녹색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생위원회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상도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준)전국공공상품권연합회
한국농수산물유통상생발전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농협유통노조 농협하나로유통노조 동원F&B노조 마트산업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서비스일반노조 수협유통노조 웰카코리아노조 이랜드노조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민병덕, 오세희, 김남근, 송재봉 국회의원

진보당 | 윤종오, 정혜경 국회의원



순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좌 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인사말

방기홍 공동대표(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05
김광창 공동대표(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07
우원식 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9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국회의원	11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19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21

발 제

발제 1.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과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문제점 - 송관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5
발제 2.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중소상인·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 유병국(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36
발제 3. 새벽배송·심야노동과 노동자의 건강권 - 조건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45

토론

- | | |
|---|----|
| 토론 1.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생존권, 정부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
- 박용만(한국마트협회 회장) | 56 |
| 토론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 노동 변화, 의무휴업 폐지 문제
- 신승훈(마트산업노조 부위원장) | 60 |
| 토론 3. 새벽배송 확대와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물류
- 김양희(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65 |
| 토론 4. 이재명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배경 및 입장
- 산업통상부(조근상 유통물류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김현동 과장·소공인성장촉진단장)
- 고용노동부(이지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과장) | 70 |

부록

- | | |
|---------------------------------|----|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 74 |
|---------------------------------|----|
-

인사말

**방기홍**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중소상인지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무한 속도 경쟁을 넘어, 노동자와 상인이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방기홍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시민사회와 노동계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유통시장은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거대 유통자본의 무한 속도 경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및 의무휴업 시간대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마치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유통산업을 활성화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직 거대 유통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규제 완화에 불과합니다.

일부 상인 단체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전체 상인들의 합의인 양 포장하여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 역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골목상권 중소기업들의 마지막 생존 기반마저 뿌리째 흔드는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엄중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무한 배송 경쟁의 뒤편에 가려진 ‘노동자의 눈물’입니다.

밤낮없는 무한 속도 경쟁은 노동자를 밤샘 과로 노동으로 내몰고 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편의와 이윤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건강한 사회의 지속가능성 또한 사라집니다. 노동자와 중소상인, 사장님과 알바생이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이 유입니다. 우리는 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유통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 굳건히 연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전환, 변화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방대하고 더 편리함을 찾습니다. 그 욕망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Ai시대에도 더 인간다움, 더 안전함, 더 공공적인 가치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속도에 가려져 방치된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망설일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아주신 지혜와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와 올바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09.11.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방기홍



김광창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광창입니다.

오늘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회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중소상인과 물류유통노동자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 내어주신,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님, 김남근 국회의원님, 민병덕 국회의원님, 송재봉 국회의원님, 오세희 국회의원님,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님, 정혜경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매우 급박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장을 맡아주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명 본부장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송관철 연구위원님, 인천대 유병국 교수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님, 한국마트협회 박용만 회장님, 마트산업노조 신승훈 부위원장님,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강행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언제나 함께 투쟁하고 있는 한상총련과 중소상인동지들, 서비스연맹조합원동지들 반드시 승리합시다.

이재명정부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출발은 쿠팡의 독점적 지위를 경쟁체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쿠팡의 저렴한 판매가격은 납품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강제로 할인하게 만들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쿠팡의 새벽배송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 클렌징이라는 이름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피말리는 고강도노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책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듯이, 쿠팡의 독점문제는 쿠팡의 편법과 위법을 규제하고,

<온라인플랫폼법>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입장은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의 생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죽이는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제2, 제3의 쿠팡과로사가 대형마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리함만이 절대가치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밤과 휴식,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반문명적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강행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정책기조를 보면서, 저희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과로사 방지 대책 없는 심야새벽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대전제에서,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숙의의 장, 결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비스연맹은 중소상인과 함께 유통노동자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9.11.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광창

**우원식****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심야 노동과 노동자의 건강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국회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공론장을 함께 마련해 주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방기홍·김광창 공동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송재봉, 오세희 의원님,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님과 함께 해주신 노동·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은 온라인 플랫폼 유통·물류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과도한 심야 노동과 과로사의 비극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위험한 밤샘 노동과 무제한 속도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규제 완화 논의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과열된 심야 배송 경쟁을 바로잡기보다 오히려 오프라인 현장으로 그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공론화를 통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온라인유통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 현장 전반이 겪고 있는 경영 위기와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새벽배송 규제 완화’가 과연 대형마트의 위기를 극

복합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매장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생활 밀착형 거점입니다. 이러한 거점을 새벽 배송을 위한 물류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심야근무에 따른 가산임금과 차량 운영비 등 추가 운영비용을 발생시켜 오히려 마트의 경영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허용이 자칫 대형마트에는 실익 없는 출혈 경쟁의 덫이 되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심야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유통의 본질적 회복은 현장 매장의 집객력을 높이고 노동자와 입점 점주,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더 빠른 배송’이라는 단기적 속도전을 쫓는 것이 아닌 유통 생태계의 건전성과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직면한 현실적 한계를 짚어내고, 노동의 가치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경청하며 책임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9.11.
국회의원 우원식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국회의원**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드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최근 상생협력기금과 신선식품 판매 제한, 동네 슈퍼의 배송 기반 지원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푸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현장의 피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쿠팡의 독점과 과도한 심야노동 문제는 해당 기업과 배송 구조를 제대로 규율해 해결해야 합니다.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칫

더 빠른 배송을 둘러싼 경쟁만 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리함 뒤에는 밤새 상품을 고르고 포장하고 운전하는
노동이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있습니다. 정책은 그 비용을
누가 떠안게 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규제 개선과 상생 대책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책과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09.11.

국회의원 민병덕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 중소기업의 생존권, 노동자의 건강권,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공동주최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위원장을 비롯한 우원식, 김남근, 송재봉, 정혜경, 윤종오 의원님과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은 AI와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 그 근간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논의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350여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정육점, 청과물점, 반찬가게 등 골목상권 생계형 업종의 주력품목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까지 허용된다면, 골목상권이 체감하는 경쟁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최우

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서두르는 것보다 그 변화가 미칠 영향부터 살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생존권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더 빠른 배송을 위한 24시간 물류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 함께 따져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의 중소기업인과 노동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무제한적인 배송 경쟁이 아닌 골목상권과 노동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정책의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규제완화라는 이름 아래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09.11.
국회의원 오세희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먼저,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우원식, 민병덕, 송재봉, 오세희, 윤종오, 정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해 주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분들과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소비자의 거래 습관 변화와 함께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새벽배송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여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유통 대기업들까지 이 경쟁에 가세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중심의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생존권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대형마트의 주요 판매 품목은 신선식품, 식자재, 생필품 등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 동네마트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핵심 품목과 겹칩니다. 자본력과 전국적인 오프라인 점포망, 주차장과 냉장·냉동 물류망을 이미 완벽하게 갖춘 대형마트에게 새벽 시간의 빗장까지 풀어

준다면, 지역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밤낮없는 배송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소상공인들은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평생을 일궈온 삶의 기반과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야간·심야 장시간 노동은 유통·물류 노동자의 건강을 처참하게 파괴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초고강도 야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과로사와 산재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희생시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규제완화는 결코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형마트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막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내고, 소상공인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든든히 지켜내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9.11.

국회의원 김남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 국회의원 송재봉입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 중소기업의 생존권, 노동자의 건강권,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우원식·김남근 의원님, 진보당 정혜경·윤종오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주시길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배송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약 4천억 원 규모였던 새벽배송 시장은 2020년 약 2조 5천억 원으로 성장했고, 2025년에는 약 1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새벽배송 확대가 유통산업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그동안의 영업규제가 성장 정체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부진의 원인을 규제에서만 찾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유통환경은 이미 크게 바뀌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근거리 소량 구매 수요 확대, 온라인 소비 확산, 생활권 중심 소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대형 매장과 대용량 묶음 판매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얼마나 혁신했는지, 오프라인 매장만의 경쟁력을 충분히 만들어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을 규제완화 요구로만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자본력과 물류망을 갖춘 대형 유통기업의 영업영역이 새벽시간대까지 확대된다면 전통시장, 동네슈퍼, 중소유통업체는 더욱 불리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배송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규제를 풀어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지역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는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노동자의 휴식권을 함께 고려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이를 바꾸려면 시장 확대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골목상권에 미칠 피해, 중소유통업체의 대응 가능성, 노동자의 야간노동 확대 문제, 기존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일부 의견을 전체 상인 사회의 동의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생협력기금과 같은 사후 지원책만으로 구조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를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의 건강권,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차분히 짚어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규제완화를 기정사실로 두고 속도를 내기보다, 그 영향과 피해를 먼저 검토하고 우리 유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기업과 지역상권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새벽배송 확대가 골목상권과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함께 고려되는 유통산업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09.11.

국회의원 송재봉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윤종오입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국회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좌장,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단순한 유통 규제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생존권,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의 방향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쿠팡 독주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새벽배송을 하는 것이 쿠팡 대책일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무한경쟁을 바로잡아야지, 그 경쟁을 대형마트와 전 유통산업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마트 현장은 어렵습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의 고용인원은 2025년 말 5만 853명으로 1년 전보다 3,321명 줄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산재는 늘었습니다. 대형마트업계 산재는 2020년 411건에서 2023년 6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동자는 줄었는데 산재는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면 부담은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진열, 판매, 재고관리 업무에 피킹, 패킹, 배송 준비까지 더해집니다. 심야새벽노동도 늘어납니다.

새벽배송은 소비자에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밤에 일하고, 잠을 줄이고, 휴식을 포기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익라면 사회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낡은 규제가 아닙니다. 골목상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보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반대합니다. 필요한 것은 오프라인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온라인 유통의 심야새벽배송 경쟁을 규제하는 일입니다. 쿠팡의 폭주를 막겠다고 노동자와 중소상인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더 빠른 배송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더 많은 영업보다 노동자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멈추고, 유통산업의 공정한 규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보당도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9.11.

국회의원 윤종오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시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밤늦게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배송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편리함을 위해 누군가는 한밤중에 상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며, 운전하고 배송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비롯한 물류·배송 현장에서 심야노동과 과로 문제가 반복되어 왔고, 우리는 어떻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인지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해법은 대형 유통기업의 새벽배송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논의가 더 빠른 배송을 위한 규제완화로 이어져야 합니까.

편리함의 대가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대형마트가 새벽시간까지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면 자본력과 물류망을 갖춘 대기업의 영업영역은 사실상 24시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완화를 결정하고 이후 상생협력 기금 등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서는 구조적인 격차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유통산업의 발전이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더 빠른 배송이 아니라,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될 수 있는 유통산업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노동자와 중소기업,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고,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통산업의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09.11.

국회의원 정혜경

발제문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과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문제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쿠팡 과로사 방지 논의의 변질

-과로사 방지가 아니라 새벽배송 경쟁 확산으로-

송관철

All rights reserved

Table of Contents

I. 쿠팡 과로사 방지 논의

II. 논점 이동: 과로사 방지에서 규제 형평성

III.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의 쟁점

IV. 야간노동 확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방안 마련 필요

I. 쿠팡 과로사 방지 논의

1. 반복되는 과로사 문제

2020년	물류센터 분류 및 상하차 작업 노동자 사망
2023년	주 6일 야간 근무와 고강도 노동으로 쿼플렉스 기사 사망
2025년	타인 명의 아이디(ID)로 8일 연속 야간 노동하던 배송기사 사망
2026년	휴무일 백업기사로 호출돼 새벽 야간배송 중 심근경색으로 배송기사 사망

얼마나 많이 죽어야 과로사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할 것인가?

쿠팡CLS는 2024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참석하여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가?

P.2

1. 쿠팡 과로사 방지 논의

2. 배송기사의 노동실태: 장시간/야간/고강도/소득불안

2025년 쿠팡 배송기사 노동실태 조사결과

1) 근무일

- 응답자의 약 30%는 일상적으로 주 6일 이상 근무.
- 응답자의 54.1%는 연속하여 주 7일 근무한 경험이 있음.
- 응답자의 49.6%는 다른 사람의 ID를 사용하여 근무한 적이 있으며, 경험자의 39.5%는 대리점의 요청 때문이라고 응답

2) 근무시간 (과로사 산정기준 고려 야간근로 30% 가산)

구분	주당 추정노동시간
주간기사	58.0시간 (주 5일 가정)
야간기사	60.5시간 (주 5일 가정 및 22시~06시 30% 가산)

P.3

1. 쿠팡 과로사 방지 논의

2. 배송기사의 노동실태: 장시간/야간/고강도/소득불안

3) 노동 여건

- 다회전 횟수가 증가함 : 2.2회 (2024년) → 2.31회 (2025년) / 야간기사는 2.7회(2024년) → 2.83회 (2025년)
- 클렌징, 용차비 부담 등으로 82.2%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응답
- 야간노동은 격주 5일제(48.5%), 주5일제(38.3%), 주6일제(10.2%) 순으로 나타나 연속된 야간 노동이 불가피한 구조임
- 야간노동의 어려움: 피로(71.9%), 교통사고 위험(62.3%), 화장실 이용 불편(54.5%) 등
- ※ 현재 수입이 일정정도 보장된다면 심야시간(00시~04시)을 피해서 근무하고 싶다는 응답이 65.3% 확인됨

4) 업무량과 소득

- 하루 평균 388건 물품 배송 (2024년 359건보다 8.1% 증가된 수량 처리)
- 월평균 소득은 2024년보다 0.3% 감소. 그러나 필수지출(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 제외 시 1.8% 감소

배송마감시간제, 강제노동(프레시백/에코백 회수 및 청소), 클렌징을 넘어 더 일해도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과로를 가중시킨다.

☞ 야간기사 노동시간 감축(초심야 배송제한)과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P.4

Table of Contents

I. 쿠팡 과로사 방지 논의

II. 논점 이동: 과로사 방지에서 규제 형평성

III.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의 쟁점

IV. 야간노동 확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방안 마련 필요

II. 논점 이동

1. '배송기사와 소비자가 새벽배송 제한에 부정적이다'는 프레임 등장

일부 언론에서 배송기사와 소비자의 소득이나 편의 논리로 야간노동이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필요성을 희석시키고 있음.

새벽 배송, 현직 기사들의 의견은?

단위: %, 2405명 배송 기사 대상 긴급 설문조사



새벽 배송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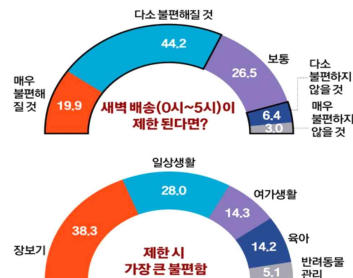
자료: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출처: 중앙일보기사(2025.11.7.)

The JoongAng

새벽 배송, 소비자들의 의견은?

단위: %, 1000명 응답, 9월 24일~10월 14일 조사

※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합계가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음



자료: (사)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더브레인 The JoongAng

P.6

II. 논점 이동

2. '쿠팡 독주와 대형마트 역차별' 프레임 등장

온라인 쇼핑의 빠른 성장으로 온/오프라인 매출 점유율 역전

온라인 쇼핑의 매출 비중

2014년 28.4%(오프라인 71.6%)

→ 2020년 48.2%

→ 2025년 59.0% (오프라인 41.0%)

2025.11.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플랫폼 시장지배력 확대에 비해 의무이행 부족

: 서비스 속도와 시장 확장에만 집중하고

정보보호 투자 및 개인정보 관리 미흡

24시간 배송 시장 개방을 통해 쿠팡의 시장지배적 구조 개편 필요

같은 소비시장에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쿠팡 등 플랫폼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365일 24시간 영업 가능한 온라인 쇼핑 vs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시간(24시~10시)이 있는 대형마트

쿠팡 등 규제를 비껴간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형마트도 24시간 배송 가능해야 쿠팡의 독주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P.7

II. 논점 이동

3. 노동자 건강권 논의의 주변화

법 취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의 보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되어 있음

법률 제11175호(2012.1.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시행 2012.1.17.)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1626호(2013.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시행 2013.4.24.)

1항 본문 중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함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함

의무휴업일을 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2일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P.8

II. 논점 이동

3. 노동자 건강권 논의의 주변화

참고사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2015두295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고 영업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의 본질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

“위와 같은 규제의 효과는 단순히 처분상대방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대형마트 등에 입점하여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상인,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농·공·상인들의 이해관계 및 대형마트를 상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판결문 중)

2018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8 합헌, 1 위헌) : 헌법재판소 2016헌바77, 78, 79 병합

해당 조항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도모,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

P.9

II. 논점 이동

3. 노동자 건강권 논의의 주변화

노동자의 건강권 외 ‘소비자 편익’,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 ‘전통시장 매출 영향’에 집중해서 논의되고 있음.

한국유통학회 ‘유통사업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26.4.1.~4.5., 2,000명 대상)

- ① 영업시간: 규제 폐지 (26.8%), 규제완화 (32.0%), 현행유지 (31.4%)
- ② 의무휴업: 규제폐지 (28.7%), 규제완화 (30.8%), 현행유지 (30.3%)

민주연구원 ‘유통시장 구조변동과 유통업 혁신방향: K-유평마트 유통혁신을 위하여’ (2026.4.9.)

-유평마트의 옴니채널(Omni-Channel)전략을 참고하여 대형마트 등 이 ‘초근접 물류·픽업·반품·체험 허브’로 전환, 옴니채널 생활 필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기능별로 재설계

-쿠팡을 비싸고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혁신 경쟁을 촉진하여 전반적으로 소비자 가치를 확대하고 시장균형 회복

KDI(한국개발연구원) Focus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평정책의 전환 방향’ (2026.5.2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효과: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 2.8%, 부산 6.2~7.9%의 증가

※ 맞벌이 가구, 자녀 있는 가구가 주말 아니면 대형마트 가기 쉽지 않음. 평일전환으로 주말 소비가 회복되었음

-전통시장 소비자와 대형마트 소비자의 분리로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해도 전통시장은 그대로 유지

☞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오프라인 업체 간 재분배, 대체보다는 온라인에 머물던 소비 일부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 영향

-(추가)지금까지 소외된 소비자의 편의 측면에서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온라인·오프라인·대형마트 간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 후생이 올라갈 수 있음.

P.10

Table of Contents

I. 쿠팡 과로사 방지 논의

II. 논점 이동: 과로사 방지에서 규제 형평성

III.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의 쟁점

IV. 야간노동 확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방안 마련 필요

III.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의 쟁점

1. 2024년 개정 논의: 규제완화와 규제 강화 공존

구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의무공휴일	온라인영업
규제 완화	2201014	최수진 의원	2024.6.27.	-	영업규제시간에도 통신판 매 허용
	2201730	이종배 의원	2024.7.15.	-	영업규제시간에도 통신판 매 허용
	2204513	강승규 의원	2024.10.2.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원칙 삭제	영업규제시간에도 통신판 매 허용
	2205090	김성원 의원	2024.10.31.	지자체장이 이를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 요일 및 휴업일수를 자율 결정	-
규제 강화	2204069	정혜경 의원	2024.9.19.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당일로 지정하고, 백화점, 면세 점, 아울렛을 추가	-
	2204237	오세희 의원	2024.9.24.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	-
	2202546	송재봉 의원	2024.8.5.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	-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P.12

Ⅲ.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의 쟁점

2. 2026년 개정 논의: 규제완화로 귀결됨

2026.2.3. 김성원 의원 등 11인, 제2216537호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했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삭제 (지역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함)

2026.2.5. 김동아 의원 등 15인, 제2216611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그러나 맞벌이·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주말과 새벽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 포함)에는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음(5항 신설)

P.13

Ⅲ.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의 쟁점

3. 2026년 개정 논의의 쟁점

쟁점1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목적은 중소유통 보호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 논의에는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음

구분	개정 취지
김성원 의원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미비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김동아 의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맞벌이, 1인가구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 비취볼 때,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온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 해소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P.14

Ⅲ.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의 쟁점

3. 2026년 개정 논의의 쟁점

쟁점2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예외 허용은 사실상 24시간 노동체계를 전 유통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단순히 소비자의 주문 처리 허용이 아니라 야간 시간대 피킹, 패킹, 상차, 배송 등의 노동을 허용하는 법안임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 ※ 단 생물법 활용으로 우회 배송 가능
- ※ 법 개정시 기존 마트/SSM을 배송 거점(MFC: Micro Fulfillment Center)으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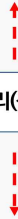
새벽배송 가능 범위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계열

← - - - -

기존: 쿠팡(로켓배송/로켓프레시), 컬리(샷별배송), 오아시스마켓, SSG닷컴 등

- -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4시간 365일 배송 가능

- ※ 단, 새벽배송 등의 과정에서 과로사 발생

P.15

Table of Contents

I. 쿠팡 과로사 방지 논의

II. 논점 이동: 과로사 방지에서 규제 형평성

Ⅲ.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의 쟁점

IV. 야간노동 확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방안 마련 필요

IV. 야간노동 확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방안 마련 필요

1. 영업시간 규제 철폐 요구는 사실상 “새벽배송 허용 요구”에 불과함

김동아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 포함)에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을 제한하지 않음.
-겉으로는 변함없음. 하지만, 속에서는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동공급 불가피

P.17

IV. 야간노동 확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방안 마련 필요

2. 새벽배송 경쟁이 유통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



P.18

IV. 야간노동 확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방안 마련 필요

2. 새벽배송 경쟁이 유통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

대형마트가 야간/새벽 배송을 위한 MFC 기능을 함께 수행할 경우, 기존 노동자를 포함하여 피킹, 패킹, 배송을 위한 야간/새벽 배송물류 업무를 누군가가 수행해야 하며, 이는 **과로·야간노동 위험에 따른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오히려 산업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로 귀결될**



P.19

IV. 야간노동 확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방안 마련 필요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

대형마트 규제 철폐가 아니라 “새벽 배송,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로 온오프라인 규제의 불균형 해소

- 형평성의 기준은 ‘규제받지 않는 쿠팡’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유통산업의 공통 기준’이어야 함.
- 쿠팡의 24시간 배송체제가 과로사 위험을 낳았다면, 정책의 방향은 대형마트 규제 철폐로 쿠팡의 24시간 배송체제의 확대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유통산업(배송포함) 전반의 야간노동 규제 강화여야 함

※(참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20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중소상인 ·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유병국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의의원 대표발의)

내용	제안이유
<u>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u>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u>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u> (포장, 반출, 배송 등을 포함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다. 2)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 개정법의 문제점

1) 대규모점포 영업규제의 폐지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등 사실상 영업규제의 폐지를 뜻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벽배송만 허용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에는 주간배송도 못 하는데 1년 365일 주문 가능한 이커머스와 동등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매일경제, 2026).

-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를 사실상 쿠팡과 같은 온라인 전문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의미로 이 경우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를 규제의 근간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다.
-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제(입지규제)와 함께 그나마 남아있던 영업규제마저 사라질 경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대규모점포의 무차별한 시장압박에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장치는 사실상 전무하게 된다.

2)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에 따른 문제점

- 대부분 언론의 보도(“주말에 마트 열자, 전통시장이 살아났다” 매경, 5.21)와는 달리 의무휴업일 전환후 소상공인의 매출의 경우 증가했다는 일관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폐업률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① 이진국(2026) 매출변화 :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카드데이터 활용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 · 식품 · 잡화 및 (농수산물 · 정육점 · 청과물 등으로 구성된) 농축수산 · 전통유통 업태에서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 단, 위 분석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 기간에 따른 점포유지 및 업종유지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매출시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기 어렵

다는 제약이 있다.

② 유민희(2024) 평균구매액 변화 : 수도권 1500가구 소비자 패널을 이용해 연 130만건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

- 2022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의 주말 식료품 구매액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일요일)과 영업하는 일요일을 비교한 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전통시장은 하루 평균 20만원이 적게 나타났는데 반하여 슈퍼마켓은 110만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가운데 전통시장보다 근린상권에 속하는 슈퍼마켓의 경우 의무휴업일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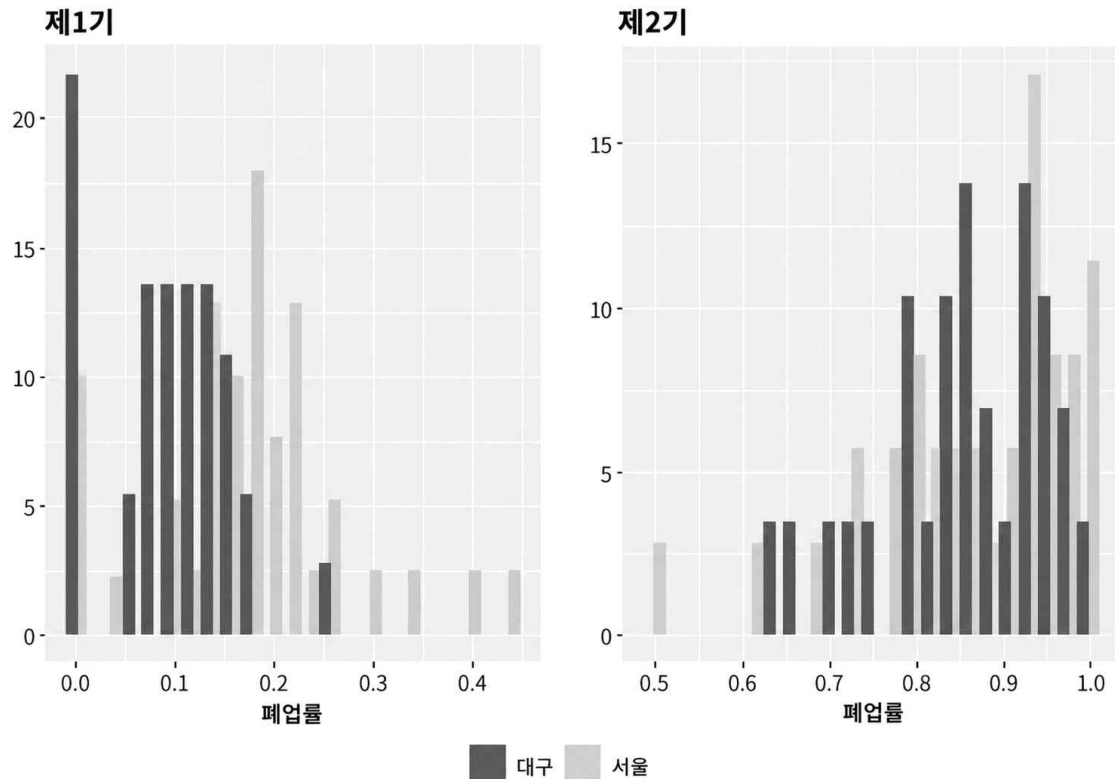
③ 유병국외(2025) :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상가업소데이터 분석

- 세부업종별 분석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으로 대구시의 음/식료품소매와 영세종합소매업종의 폐업률이 변경전에 비해 약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료품소매업종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폐업률의 증가치가 6.6%로 나타났으며 중대형종합소매업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폐업률의 증가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이같은 결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이 소매업중에서도 중대형업체보다는 음/식료품소매 및 영세종합소매 등 영세소매업체의 폐업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최근처럼 전반적인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소매업체는 더욱 한계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 등 영업규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 매출액이외에 창업/폐업 등의 자료가 좀 더 적절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폐업률 분포의 도시별 비교



3) 독점규제의 불일치(mismatch) 문제

① 가장 흔한 규제의 mismatch 사례는 국내 규제가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생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 문제이다. 독점적 플랫폼 규제는 특정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막강한 온라인 사업자의 독점적 폐해를 직접 규제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는 대신 경쟁력이 열악한 국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내세우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어 심각한 규제 불일치를 야기한다.

- EU는 구글·애플·메타·아마존 등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 앱마켓 외부결제 허용, 데이터 결합 제한, 광고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2022년 제정해 2024년 3월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오마이뉴스, 2025).
- 일본도 2020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아마존·라쿠텐·앱스토어·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거래내역 공개, 약관 설명, 자기평가 보고 등 다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독일도 2021년 경쟁법(GWB) 10차 개정을 통해 '시장 간 경쟁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기업'(19a조) 제도를 도입해,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만 있어도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미 구글·메타·아마존·애플에 적용되어 검색·쇼핑·앱스토어 등 여러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제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미국 역시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에서는 16개월 조사 끝에 2020년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구글·애플·아마존·메타의 독점적 지위와 불공정 행위를 폭넓게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미 하원은 2021년 5개 반독점법 패키지를 발의했고, 미 상원도 앱마켓의 자사우대를 제한하는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이러한 대내외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차원에서 가격일치(price coherence 혹은 price parity)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진 시정하려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Wang and Wright, 2025). 이같은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 규제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② 독점적 온라인 사업자의 최대피해자는 대자본을 가진 대형마트가 아닌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강요당하거나 판매감소에 따라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모든 정책대안은 이러한 독점적 피해를 우선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의 확장은 흔히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수요를 빼앗는 '탈취효과(business-stealing externality)'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영향은 소매업체의 규모 및 업태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 규모 및 온라인대응도 : 한국은행(2025)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소매업 중에서 자원과 인지도를 가진 대형 업체 혹은 온라인 판매를 도입하거나 상품구성이 다양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인 반면, 영세한 점포소매 자영업체들은 경영성과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역내 온라인소비 비중이 1%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소매 자영업체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5.1%, 비수도권 7.2%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매업태 : 온라인 지출증가에 따른 영향이 소매업태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이공, 2026). 소비자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하는 반면 SSM, 편의점, 기타 전문유통업에서는 지역(읍면동)의 1인당 온라인 지출 증가 (1%)가 해당 업계의 시장 확장(각각 0.221%, 0.324%, 0.356%)

으로 이어졌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유통채널과는 차별화된 수요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대형마트의 문제

① 대형마트의 영업실적 부진원인이 새벽배송을 못해서인가? 즉, 지금까지 온라인사업에 전사적 투자를 진행한 바 있는 대형마트가 단순히 새벽배송을 못해서 영업부진을 겪고 쿠팡 등 온라인 사업자의 경쟁상대가 안되는 것일까?

- 대형마트가 역차별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주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자(이공, 2026). 보고서에 따르면 로켓배송이 도입된 상황에서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소비자 1인당 오프라인 결제 건수는 0.010% 더 감소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당 소비자 수는 0.023% 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업체별 세부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감소효과는 현재로서는 유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소매업 성장이외에 대형마트 부진을 초래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첫째, 대형마트 경쟁사간 과다출점에 의한 수익성 저하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형마트, SSM 등은 상권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해 인접 지역에 중복 출점을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동일 브랜드나 경쟁사 간의 상권 겹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둘째, 다이소, 올리브영, 무신사 등 오프라인 전문점의 급성장을 들 수 있다(전수찬, 2026).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비식품 경쟁력이 약해졌고, 그 결과 2024년 대형마트 식품 매출은 2.3% 늘었지만 비식품은 7.9% 감소한 결과를 초래했다. 새벽배송의 경우 이러한 비식품 부문보다는 주로 신선식품이 해당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대형마트 실적부진의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셋째,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는 급속히 성장하는 이커머스시장에 대해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마트모델을 유지하며 초기대응에 실패하였다(김준성, 2025). 이마트의 경우 이마트앱과 SSG닷컴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온오프라인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높은 마진과 오프라인 매장수익성에 의존하다보니 온라인에서 과감한 가격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

②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대형마트는 과연 경쟁력 있는 온라인 사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대형마트는 오프라인기업의 온라인화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야간운영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월마트가 10년 이상 공을 들여 이룩한 온오프라인통합과 첨단데이터기반 운영시스템을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을까?

- 현재 온라인 쇼핑시장 점유율(2022년 말 거래액 기준)은 쿠팡(24.5%)과 네이버(23.3%)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장을 전문몰, 종합몰, 카카오, SNS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 쿠팡, 네이버쇼핑, 마켓컬리 등은 전문적인 온라인 사업자로서 각자의 확실한 성장전략 및 시장기반을 가지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혁신, 와우멤버십 등을 들 수 있으며 네이버쇼핑의 경우 검색 콘텐츠, 커뮤니티와 쇼핑의 연계와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결제 편의성 극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켓컬리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 이러한 시장여건에서 온라인 성공경험이 일천한 대형마트가 새벽배송만으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며 결과적으로 골목상권만의 희생으로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만 더욱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즉,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전국 약 1,800개 대형마트와 SSM 점포가 24시간 운영되는 물류센터로 활용될 것이며 이때 대형마트가 타깃으로 하는 지점은 쿠팡이 강점을 가진 전국 단위의 배송이 아니라 도심 점포를 거점으로 하는 1- 3시간 이내의 초단거리 배송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경향신문, 2026). 이 경우 기존 오프라인 대형마트 및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잠식으로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게는 치명타를 될 것이다.

③ 대형마트는 경쟁력이 의문시되는 온라인 시장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본업인 오프라인 유통에 충실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신선식품과 외식·문화처럼 온라인이 대신하기 어려운 기능을 바탕으로 키워 고객이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야 할 이유를 만드는 전략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단순히 점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포에서 고객의 방문 빈도와 체류시간, 구매액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오프라인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근 대형마트 매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 이마트 : 복합체류형 공간의 확충으로 스타필드 마켓 4개점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8% 늘었다. 같은 기간 이마트 전체 매출 증가율(2.7%)을 크게 웃돌았다(CEO스코어 데일리, 2026).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안에 경기도와 전북 군산에 스타필드 마켓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매출과 고객 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10%, 5% 늘었고 누적 방문객은 4만5000명을 넘어섰다. 수원점은 600평 규모의 키즈카페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테넌트(입점매장) 매출이 12% 증가했다. 삼산점도 지난해 6월 ‘짱구게임장’을 들인 뒤 1년간 테넌트 매출이 리뉴얼 이전 같은 기간보다 약 1.5% 늘었다.
- 롯데마트 : 식품 특화 포맷인 ‘그랑그로서리’는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프리미엄 식재료, 자체브랜드(PB) 등을 강화하고 매장의 약 90%를 식료품으로 구성한다(아주경제, 2026). 송파점은 2024년 8월 약 700평 규모의 상설 미술전시장 ‘엠아트센터’를 도입했다. 도입 첫 달 전체 매출과 고객 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10%, 5% 늘었고 누적 방문객은 4만5000명을 넘어섰다. 수원점은 600평 규모의 키즈카페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테넌트(입점매장) 매출이 12% 증가했다. 삼산점도 지난해 6월 ‘짱구게임장’을 들인 뒤 1년간 테넌트 매출이 리뉴얼 이전 같은 기간보다 약 1.5% 늘었다.

5) 무엇이 (역)차별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 (대표적 주장) 온라인 비중이 60%에 육박하는데 대형마트만 밤새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

-> 대형마트처럼 밤새 운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자본 및 시설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공세에 속수무책 방치되어 있는 전국 방방곡곡 1,400여개 전통시장과 6만여개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상황은 차별이 아니며 바로잡아야 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참고문헌>

- 김준성, 이마트는 왜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밀렸을까, 브런치, 2025.5.25.
- 경향신문, “쿠팡 잡으려다 골목상권 무너질라…‘대형마트 24시간 시대’ 누가 웃을까”, 2026. 2.15.
- 매일경제, “대형마트 역차별, 14년 만에 풀릴까?…새벽배송 허용 “의무휴업 손 안 보면 반쪽””, 2026, 2.23.
- 아주경제, 온라인에 밀린 대형마트, '머물고 먹는 곳'으로 승부수, 2026.09.07.
- 오마이뉴스, “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 때리기'라고?” 2025.12.01.
- 유민희,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해외사례 소비패턴 빅데이터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24
- 유병국 김순홍,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영세소매업 폐점률 영향 분석”, 물류학회지, 35(1), pp.95-105, 2025.
- 이공,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KDI FOCUS, 2026.
- 이진국,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KDI FOCUS, 2026.
- 전수찬, 대형마트 위기의 본질과 유통산업 규제 완화 논쟁의 문제점,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2026.
- CEO스코어데일리, “입지 좁아진 대형마트…이마트 공간혁신·롯데마트 물류혁신으로 생존 모색”, 2026.08.28.
- Wang, C., and Wright, J. “Regulating Platform Fe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23(2), pp.746-783, 2025.
- 한국은행,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BOK 이슈노트, 2025.

“

새벽배송 · 심야노동과 노동자의 건강권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새벽배송, 심야노동과 노동자 건강권

2026.09.1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 장시간/야간노동과 건강영향
- 확대되는 심야노동이 야기할 노동, 건강의 문제
- 제언

들어가며 - 새벽배송의 확대와 규제완화

- 한국에서 새벽배송, 야간노동의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연관됨.
- 특히 서비스업에서 확대되고 있는 야간노동
- 야간노동의 일자리 -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구조의 확대와 함께 가는 경향

들어가며 - 새벽배송의 확대와 규제완화

- 규제완화의 흐름 -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제도의 폐지(완화), 영업제한 시간 배송 불가 폐지, 새벽 배송 허용...
- 마트산업의 변화
 - 자본간 경쟁 심화 (쿠팡 등)
 - 온라인으로 급속한 전환
 -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기능 (PP 센터 등)
 - 물류센터 직접 운영 (야간 전담 배송 업무 증가), 자동화 확대 시도
 - 고용형태 변화 (비정규직, 특수고용 증가)

들어가며 - 새벽배송의 확대와 규제완화

- 24시간 배송 체계가 운영되는 한 24시간 노동 (포장, 배송)이 존재
- 소득(야간수당)이나 '직업선택권' 등과 대립되어 보이는 야간노동 규제 논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영향

- 장시간노동과 /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등),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사고, 자살, 간 질환, 갑상선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등과의 연관성은 이미 확인됨.
- 장시간 노동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교란, 면역기능의 영향, 생활습관 변화 유도 (금연 어려움, 음주 증가, 수면장애, 식습관/생체리듬 교란 등)
- 가족 및 사회 생활, 일생활 균형 영향

야간노동과 건강영향

- 야간을 포함한 교대근무 보다 야간고정노동에서 더 나쁜 건강결과 (영구적 생체리듬 전환되는 경우 거의 없음)

(1)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 혈압 상승 유발, 휴식중 혈압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뇌심혈관질환 부담
- 34개의 연구, 총 2,011,935명의 연구 대상자를 포함시킨 메타분석 결과 야간노동 포함한 교대근무는 심근경색의 상대위험도 1.23배, 관상동맥질환 1.24배, 뇌경색 1.05배 증가

(2) 당뇨병

-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뇨병 위험비가 1.09배 증가 (남성 연관성 더 큼)
- 야간노동의 음주 유발, 식사의 질 감소 → 인슐린 분비에 영향

(3) 사고 및 생산성 저하

- 지난 2주간 수면장애가 있었던 경우 치명적인 산업재해 발생 위험 1.89배 증가
- 야간노동으로 인한 피로,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의 증가

야간노동과 건강영향

(4) 소화기계질환

- 일주기 교란, 소화효소 분비에 영향
- 소화불량, 속쓰림 등 위장관 증상, 소화성 궤양과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발생위험 증가

(5) 수면장애와 피로

- 일주기 교란, 자주 잠에 깨거나 수면 각성 패턴이 방해되는 등 수면의 질 저하
- 이차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거나, 심혈관질환, 암 발생과도 연관

(6) 암

- 야간노동 포함한 교대근무가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Group 2A)
-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관련성 있는 암으로 보고됨.
- 생체리듬 방해로 인한 암 발생 (멜라토닌 분비 억제, 면역 억제, 만성 염증, 세포증식과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항상성 등)

야간노동과 건강영향

(7) 우울증, 기분장애 및 자살

- 야간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증, 기분장애와 자살 경향성의 악화와 밀접한 관련
- 야간노동 시간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 증가 (가정/사회생활의 단절, 사회적 지지 부족 등)
- 수면장애, 멜라토닌 분비 이상, 비타민D 합성 장애 등은 우울 증상 발현의 주요 기전

(8) 유·사산, 조산 등 재생산건강

- 체내 생체리듬, 호르몬 분비 교란 등으로 야간근무 시 난임, 유산, 사산 경험비율 증가

장시간, 불안정 노동구조에 놓인 유통물류 노동자

-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장시간, 야간노동과 이에 따른 건강영향

(1) 높은 노동시간

- 전체 응답자 62.1 ± 18.3시간, 주간 60.4 ± 17.1시간, 야간 68.1 ± 20.9시간
- 야간 중 주 60시간 초과해 일하는 경우 68.3%
- 매우 부족한 휴일, 비사회적 · 비표준적 노동시간의 감내

(2) 높은 노동강도, 업무 중 사고/질병

- 지난 1년간 사고경험 90.8%, 부딪힘 (66.2%), 넘어짐 (52.8%), 교통사고 (45.8%)
- 요통 (88.0%), 상지 근육통 (95.1%), 하지 근육통 (91.9%), 두통과 눈의 피로 (76.4%), 불안감 (62.7%), 전신피로 (94.0%)
- 우울증상 42.8%, 자살사고 10.6%

• 출처 : 마트 온라인배송 노동자 284명 대상 설문조사 (2022, 한노보연, 서비스연맹)

장시간, 불안정 노동구조에 놓인 유통물류 노동자

(3) 장시간 노동 구조와 연동된 다단계 하청, 특수고용의 굴레

- 배송기사들이 작업속도를 '자발적'으로 높임.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이 배송 지연을 늦추는 새벽배송의 특징 & 자차 등 입직 위해 투자한 비용 만회 등)
- 건당 수수료 위시, 시간당 수입을 얼마큼 올리느냐가 개인의 '능력'으로 환원시키는 특수고용직 구조
- 물류산업 팽창이 특수고용직 배송기사의 고용형태와 더해짐. '본업+부업의 연장노동이 일반화된 구조'와 동기화
- 배송노동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노동 3권 보장 미비
- 아침에 퇴근하는 생활이 다른 가족들의 생활 패턴과 일치하지 않음. 일하지 않는 시간의 '여가시간'의 의미와 효능이 축소

"집에 저 혼자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도 딱히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 더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온라인배송기사 면접 중)

장시간, 불안정 노동구조에 놓인 유통물류 노동자

- 새벽배송 규제 완화에 따른 피킹 패킹 노동자의 강한 노동강도
- 새벽배송 규제 완화 → 전국 점포가 밤에 피킹·패킹(PP) 작업이 이뤄지는 도심 물류 거점으로 변화 예상
- 전통적으로 오후 6시 이내 배송을 완료해오던 오프라인 매장 기반 배송을 위해 매장피킹 노동자들은 오후 4~5시까지 근무했었음. 그러다 마트 배송 시간 확대와 함께 저녁 9시나 10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함.

(1) 매우 강한 노동강도

- 매우 빠른 속도 및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춘 노동 : “근무시간 대부분~내내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한다” 썬닷컴 76.19%, 홈플러스 이커머스 69.83%

• 출처 : 마트 피킹패킹 노동자 305명 대상 설문조사 (2022, 한노보연, 서비스연맹)

장시간, 불안정 노동구조에 놓인 유통물류 노동자

(2) 매우 높은 업무 중 사고/질병의 경험

- 최근 1년간 업무 중 부딪힘 썬닷컴 85.71%, 홈플러스 이커머스 73.14%
- 절반 이상 근무 중 일이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화장실 가지 못함.

(3) 노동과정 변화로부터의 소외

- 대형 PP센터로의 변화가 진행 중인 대형마트는 더 많은 기계화, 자동화 동반.
-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과정 변화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고지는 없음.
- 야간 피킹, 패킹 조 확대한 마트의 경우 저녁 전담 스텝을 일부 고용하기도 하고, 기존 매장 피킹노동자들이 교대근무를 연장해서 근무하기도 함.

“4, 5차는 야간 조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두 군데가 있어요. (중략) 저희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12시 반에 출근해서 9시 반까지” (매장 피킹패킹 면접 중)

•출처 : 마트 피킹패킹 노동자 305명 대상 설문조사 (2022, 한노보연, 서비스연맹)

야간노동은 연관, 확장된다

- 자본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사용되어 온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
- 심야노동을, 24시간 생산·유통 체제를 강화할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완화
- 새로운 산업, 새로운 노동이 만들어짐. 이렇게 만들어지는 노동 다수는 불편한 노동, 불안정한 노동, 불건강한 노동.
- 24시간 노동, 유통하는 체제는 24시간 소비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는 노동자 건강과 지구를 함께 위협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 규제

- 병원, 경찰, 소방 등의 공공영역을 제외하고 야간에 노동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야간노동의 사회적 규제)
- 필요한 것은 마트를 비롯한 사업장 영업제한 강화
- 야간노동을 해야만 생활임금이 유지되는 시간급체제 개선, 불안정 노동 구조의 철폐
- 심야노동으로 인한 건강문제 발굴 및 조직화 (산재 등)
- 자동화 등 자본 주도 기술 도입과정에 대한 개입?

감사합니다

kilshlabor@gmail.com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토론문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생존권, 정부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

박용만 (사)한국마트협회 회장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가져올
중소상인, 지역상권의 암울한 미래

1. 유통대기업의 탐욕을 눌러왔던 최소 규제

골목상권의 붕괴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은 10년 사이 5만개가 사라졌고,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골목에 있던 반찬가게, 옷가게, 신발가게, 야채, 생선, 잡화, 철물점, 조명가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골목상권 수많은 업종의 중소상인들이 일터와 생계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파괴시켜온 20여년 세월입니다. 유통대기업들은 대형마트로 시작해 SSM, 상품공급점, 창고형매장,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대.중.소 상권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출점을 해왔습니다.

이들 대기업들 스스로는 이렇게 시장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쓰러져간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입지규제, 의무휴업을 포함한 영업시간 규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 이 때문에 생겨난 최소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유통대기업은 이 역사성을 아랑곳 않고, 쿠팡이라는 사자가 등장해 눈 앞의 먹이가 줄어들었으니 저기 구석에 그나마 20%도 안되게 남아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생명줄마저 먹이로 떼어달라는 무지막지한 주장이외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인 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한 유통생태계 구축입니다.

2. 지역 상권 무너뜨리는 대형 마트 새벽 배송 허용

골목상권은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신선식품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공급하며, 가족 단위 고객들의 장바구니를 채워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주민 밀착형 생활 터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상권 내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현재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업 현장에서는 시급한 개선 대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움직임까지 가시화합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점포망과 물류,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형마트들이 새벽 배송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면 지역 내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강점으로 인식되던 채소와 과일, 육류, 수산물 등 신선식품 시장까지도 거대 자본력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큼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지역 유통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소수의 거대 플랫폼과 유통 대기업만 남은 상권에서 소비자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정부의 해괴한 프레임과 의견수렴 과정

정부의 새벽배송 허용 드라이브에 부응해 여당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해괴합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언론기사 내용을 몇몇을 언급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상생조정안 제시, 단일품목 1만원 이하 판매 제한, 100억원 이상 상생협력 기금 조성,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상품 도매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업계 의견 수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동네 슈퍼에 5천억 규모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된다면 수용할 수도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언론에 공개하고, 극소수의 단체들에게만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언급이 다시 기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언플’이고, 이미 만들어놓은 프레임 하에 움직이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뒤는 더 가관입니다. 마치 모든 자영업 업종단체들이 ‘새벽배송 허용은 막을 수 없으니 상생기금이라도 받고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 는 해괴한 논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과연 입장을 발표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상인연합회가 골목상권의 모든 업종을 대표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 마트협회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연락한 번 받아본바 없으며, 회원사 역시 상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분개하는 여론이 매우 압도적입니다.

국정의 중심을 잡고 경제주체들의 균형있는 발전을 생각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해야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역할을 내던지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대세이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4. 다시,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생각해야 할 때

정부와 국회는 당장의 소비 편의성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10년 뒤 우리 유통 시장의 체계까지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크고 작은 유통 주체가 함께 공존하면서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몇몇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대기업 마트들에 전국의 지역 소비를 몰아주는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간의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 규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소비자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리함을 내세워서 간신히 유지해 가는 지역 상권의 마지막 안전망까지 걷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유통생태계를 지향할 것인지, 그리고 소규모 유통업체들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벽 배송 규제 완화가 아니라 크고 작은 유통기업들이 균형감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 노동 변화, 의무휴업 폐지 문제

신승훈 마트산업노조 부위원장

새벽배송허용·의무휴업일 평일전환,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중심으로 —

I. 규제완화의 기준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일 평일전환·폐지를 ‘넓은 규제’로 규정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 편의에만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유통산업의 경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까지 함께 완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통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심야새벽노동이 확대되

며,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 그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특히 새벽배송과 심야배송의 확대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편리한 배송서비스가 하나 더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편리함의 뒤에는 누군가가 밤과 새벽에 일하고, 잠을 줄이고,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기업이 더 많은 시간 영업하고 더 많은 배송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입니다.

II. 새벽배송 확대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새벽배송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새벽배송은 심야야간노동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야간과 새벽에 일하는 노동은 정상적인 생활리듬과 수면을 방해하고, 노동자의 피로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배송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송노동자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빠른 배송을 위해 심야와 새벽까지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송노동자의 사망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과 물류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빠른 배송과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어디까지 희생시켜도 되는가?”

새벽배송의 확대를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의 편의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유통에는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가 없고, 그 결과 배송시간 경쟁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압박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을 확대해 **동일한 배송시간 경쟁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인지**문지 않을 수 없습니다.

Ⅲ. 마트 노동자는 줄었는데, 산재는 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인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의 고용인원은 5만853명으로, 1년 전보다 3,321명 감소했습니다. 이마트는 1,473명, 홈플러스는 1,294명, 롯데마트는 554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2015년 6만1,223명이었던 3사의 고용인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1만 명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줄어드는 동안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형마트업계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0년 411명에서 2023년 6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홈플러스 276건, 이마트 24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재해 유형도 넘어짐·부딪힘과 같은 사고재해뿐 아니라 사고성 요통, 신체부담작업 등 노동강도와 밀접한 재해가 나타났습니다.

노동자는 줄었는데 산재는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줄어든 인력을 남은 노동자들이 떠안으면서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새벽배송까지 확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은 줄어든 상태에서 영업시간과 배송시간만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V.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또 다른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이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한 쿠팡과 즉시배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된다면 배송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노동은 결국 현장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진열·판매·재고관리 업무에 피킹과 패킹, 배송 준비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여기에 심야새벽시간대 배송까지 확대된다면 노동강도와 건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력은 줄고 산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긴 영업시간과 더 많은 배송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배송 논란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심야노동의 건강 위해성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심야노동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심야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새벽배송 문제를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인가”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누가 어떤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배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수면과 휴식, 건강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경쟁입니다.

V. 의무휴업일은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 역시 대부분 소비자 편의와 매출, 유통업체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노동자에게 의무휴업일은 단순한 영업 제한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특히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주말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의 일정에 참여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면 주말 영업은 확대됩니다.

하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원하는 주말 휴무를 자유롭게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주말에 쉬기 위해 개인 연차나 휴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장의 인력 부족은 이러한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휴업일 문제를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충분히 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VI.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프라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온라인 규제의 강화입니다

새벽배송과 의무휴업일 문제는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기업의 영업시간과 배송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 노동자의 휴식시간과 건강을 줄여도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미 마트 현장에서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거나 폐지한다면, 결국 부족한 인력으로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더욱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과 물류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야새벽배송 노동의 현실은 그 결과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빠른 배송, 더 긴 영업시간,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경쟁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뒤로 밀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노동자가 쓰러지고 목숨을 잃은 뒤에야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 규제가 없으니 오프라인의 규제까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심야새벽배송 경쟁을 노동자의 건강권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배송시간 경쟁과 심야새벽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영역의 노동시간과 배송시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온라인에는 규제가 없으니 오프라인의 규제도 없애자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심야새벽배송 경쟁을 노동자의 건강권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규제를 풀어 온라인의 무한경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의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폐지에 반대합니다.

기업의 매출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모든 유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를 요구합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의 무분별한 심야새벽배송 경쟁부터 규제해야 합니다.

더 빠른 배송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먼저이고, 더 많은 영업보다 노동자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유통산업의 미래는 노동자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경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규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새벽배송 확대와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물류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늘어만 가는 새벽배송, 쓰레기, 탄소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은 택배 이용량 급증으로 연결된다. 2025년 총 택배 물량은 약 59억6000만건으로 1인당 한 해 115개가량의 택배 거래를 한 셈이다. 온라인 식품 구매 역시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0조 8,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새벽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신선식품은 온라인 장보기의 일상적인 품목이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은 편리함을 댓가로 한 쓰레기 문제의 주범이기도 하다. 온라인 쇼핑 1건당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은 오프라인 대비 약 4~5배에 달한다. 새벽배송의 포장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따르면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2015년 4000억원에서 2024년 11조8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9.5배 성장했다. 새벽배송 비중이 높은 신선식품 배달은 신선도를 위해 빠른 배송을 기본으로 하고 적은 양의 물건을 그때그때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 포장, 개별 배송에 따른 더 많은 포장재 쓰레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등 부가 포장재의 양도 무시할 수 없다.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전체 생산된 플라스틱의 약 40%가 다른 물건을 포장하는 데 쓰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식품 포장재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78.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플라스틱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토양과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그 생산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16억600만톤에 이를 것이라 전망된다. 그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2015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을 위한 순환 경제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전제로 한 재활용, 재사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재명 정부가 탈플라스틱을 선언하며 이같은 흐름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포장재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정책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부터 시행한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들 수 있다. 이는 2022년 4월 공포된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용 포장공간 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예외가 많고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과대포장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안 되다 보니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과대포장이 아니라 온라인 배송 시스템 자체다.

소비자가 새벽배송을 원한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은 시민들의 실천- 장바구니,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품 사용 권장, 철저한 분리배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올해 6월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기후행동에서도 일천만 기후시민 운동을 실행수단으로 발표하며 기후시민 10가지 약속(△탄소를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지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차로 바꿉니다 △건물의 난방과 온수를 전기화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합니다 △나무를 심고 자연과 공존합니다 △생명의 원천 물과 공기를 지킵니다 △먹을 만큼 준비하고 쓰레기를 줄입니다 △이웃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듭니다) 을 제시했지만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거나 정부 규제 확대를 시사하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2021년 국민권익위가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60%는 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우선되어야 하며, 81.3%는 기업의 폐기물 발생 감축 의무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택배 포장 문제와 관련한 2026년 서울환경연합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인의 삶에서 인터넷 쇼핑은 불가피하다. 1차적 잘못은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 “쓰레기를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속도와 효율만 추구하는 기업이 비윤리적이고 반환경적인 생활 문화를 강요한다” 등 의견에서 알 수 있듯 시민들은 온라인 쇼핑과 폐기물 문제를 개인 소비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소비자 편익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는 기업의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먹거리 유통 산업은 냉장 냉동 설비 상시 가동, 물류 이동량 증가, 포장재 폐기물 증가 등 탄소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의 탄소 저감 논의가 에너지나 제조업 분야 위주로 진행되어 온 탓에 관심 밖에 있었다. 특히 온라인 먹거리 배송은 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었으나 그에 따른 탄소 배출 증가는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새벽배송 확대와 냉장·냉동 물류 증가는 구조적으로 저온 물류 인프라를 확대시키고 포장재 사용을 늘리며 소규모·다빈도 배송 등 에너지 사용 증가와 연결된다. 먹거리 유통을 에너지 다소비 분야로 인식하고 공급망 전체(Scope 3)를 포괄하는 법적 책임 체계를 마련하여 먹거리 유통 분야의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소비 문화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빠른 배송, 신선 식품 배송이 늘어날수록 유통 단계의 탄소 집약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단순한 에너지 효율화나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는 총 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이기 어렵다. 소비자에게 정보와 선택권을 주고 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새벽배송 등 고탄소 서비스에 대한 탄소 정보 제공, 포장재 줄이기 인센티브 등 수요 관리 정책과 연동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쿠팡 사태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 있다. 쿠팡의 그 모든 악덕에도 불구하고 워킹맘들이 쿠팡=새벽배송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언론을 도배했지만 정작 여성 소비자들이 왜 새벽배송에 연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플랫폼 경제가 지역 상권을 무너뜨려서 동네 가게는 없고, 당장 필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구할 수 있는 현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늦은 밤 말고는 살림을 돌볼 시간이 없는 현실. 돌봄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는 현실. 이런 현실에서 새벽배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새벽배송 확대가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닐 것이다. 쿠팡 또는 탈판, 새벽배송 허용 또는 금지라는 납작한 논의에서 한발짝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고려하는 소비, 시장에 내맡기지 않는 돌봄, 양자를 함께 추구하는 정책을 바란다.

“

**이재명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배경 및 입장**

산업통상부 조근상 유통물류과 과장

”

“

**이재명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배경 및 입장**

중소벤처기업부 김현동 과장 · 소공인성장촉진단장

”

“

**이재명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배경 및 입장**

고용노동부 이지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과장

”

부록

대책위 참여단체

	참가단위
정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민중행동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인단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준)전국골목상권연합회
	한국농수산물유통상생발전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상도
노조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조 ※ 9개 지부(이마트지부, 홈플러스지부, 롯데마트지부, 온라인배송지부, 이케아지부, 코스트코지부, SSG지부, AJP지부, 하이마트지부)
	농협유통노조
	농협하나로유통노조
	서비스일반노조
	엘가코리아노조
	수협유통노조
	동원F&B노조
	이랜드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 8개 지부(로레알코리아지부, 로레알면세지부, 록시땅코리아지부, 샤넬코리아지부, 엘코잉크지부, 클라랑스코리아지부, 한국시세이도지부, 스와치그룹코리아지부)

